



#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2017.5.23(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인권센터,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순서와 목차

사 회 |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발 제

발제 1 촛불항쟁의 기록과 조기대선의 지나온 길 .....7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발제 2 광장을 이어갈 인권운동의 도전 .....1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토 론

곽이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국장) .....37

토론자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43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49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인권운동더하기 참여 제안서.....59



발제 1.

##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촛불대선이었다

촛불항쟁의 기록과 조기대선의 지나온 길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3월 22일...1,072일 만에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몸을 드러낸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네...라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목소리를 듣자 긴장했던 마음의 근육이 풀렸다. 하지만 탄핵 인용 사유에서 제외된 세월호 유가족들은 절규했다.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그 외침에 대한 답이라도 하듯이 세월호가 올라왔다. 박근혜의 퇴진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많은 적폐들이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만 진짜 봄이라 말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최순실 40년 우정이 만들어낸 국정농단 사태는 정유라 사태를 정점으로 타올랐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부정부패 스캔들은 많았다.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최순실과 정유라가 드러낸 특권과 반칙의 지배는 인내심을 건드렸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살아 냈는데...’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느낀 건 아니었을까. JTBC의 태블릿 PC보도는 배신감의 실체를 드러냈다. 동시에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언론의 역할도 알게 했다. 자신들이 디딘 체제의 허망함 앞에서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다. 청계광장에 모일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초겨울을 통과해 봄을 맞을 때까지 23번의 촛불, 1700만의 광장이 밝혀질 줄 알지 못했다.

촛불이 이뤄낸 5달 동안 기적을 살펴보면 여러 날이 떠오른다. ‘연쇄담화범’이라 불리던 박근혜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전국 232만명이 광장에 모였다. 광화문에는 165만명이 모였다. 담화 요지는 ‘하야할 뜻이 없으며 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취지였

다. 탄핵소추 앞에서 흔들리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세월호 7시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야당의 속내를 간파한 박근혜가 던진 ‘수’였다. 시민들은 분노로 대답했다. 정치권은 바로 눈치 챘다. 결과는 압도적 다수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드러났다. 정세균 의장의 일성과 동시에 터진 첫 목소리 역시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의 것이었다. “촛불시민만세!” 대의제 민주주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직접민주주의로 돌파한 사건이라 기록하면 좋겠다.

국회청문회가 열렸다. 한 명도 소환하기 힘들던 재벌들이 줄줄이 국회에 섰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었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조운선, 김기춘, 뇌물죄로 이재용, 입시비리로 김경숙이 구속되었다. 꿈쩍도 않던 권력들이 속속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과 JTBC의 보도를 시작으로 온갖 언론이 특종들을 쏟아냈다. 정부 보도자료를 받아쓰던 언론들이 제구실을 하기 시작하는 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이러한 희망은 광장의 촛불을 지켰다.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는 박근혜 공범자들의 이야기는 먹히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촛불은 ‘나’이기 때문에 꺼질 수가 없다.”고. 그러나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영장청구를 가로막은 청와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법망을 빠져나간 우병우... 그리고 마치 또 다른 민심인 것처럼 포장하며 등장한 ‘관제테모’와 ‘박근혜 집회’. 이들의 극우적 행동과 폭력, 폭언은 도를 넘었다. 결국 탄핵반대를 외치는 집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지지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근혜 역시 한마디 애도의 말조차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들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하자

1987년 6월 항쟁은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뻔뻔함에 속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속아주는 척도 못하겠다며 뛰쳐나왔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유의 숨통을 짓밟고 선, 독재의 군화발에 맞섰다. 최루탄이 터졌고 경찰의 몽둥이질이 있었다. 그러나 물러



서지 않았고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라는 변화를 만들었다. 이어진 7,8월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2016년과 2017년을 관통한 5개월의 시민항쟁은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을까? 우선 이번 항쟁의 촉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는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어떠한 직책을 가져 본적도 없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여성에게 국가가 좌지우지된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대통령과 국가기관뿐 아니라 재벌들까지 썩은 부패의 몸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괴감이었을까. 많은 원인과 이유 중 두드러진 특징은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의 정서다. 특히 정유라 사건이 핵심적이다. 부정입학 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실체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 잘 만난 것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자신의 말을 입증했다. 이것은 안간힘 쓰며 살아내는 국민 전체의 정서를 건드렸다. 절대 다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촛불시민혁명을 ‘특권과 반칙’에 대한 ‘정의와 평등’의 싸움이라 정의해본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기폭제가 되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원인이 있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자유롭게 평화로웠다. 폭력, 비폭력 논쟁이 없지 않았지만 압도적 다수의 힘은 어떠한 물리력보다 위력적이었다. 경찰은 청와대 앞 행진을 불허했지만 법원은 연일 가처분 소송에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을 보고 있었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을 폭도 취급했었다. 2015년 11월 청와대를 향해 가던,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살수해 살해했다. 그러나 그들이 차벽과 물대포로 막지 않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엉망진창 된 ‘국가’보다 거리에 맨 몸으로 선 ‘국민’이 훨씬 성숙한 존재 들임을 보여줬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광화문 광장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다. 광화문 광장 양 옆 도로는 행진 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다. 대사관 100미터 앞 신고가 되지 않는 집시법, 주요도로가 되지 않는 집시법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촛불항쟁에 참여한 1700만명 시민은 소환장을 받아야했을지 모른다. 더 많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당장 집시법 개정과 광화문 광장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촛불 이후 야간집회가 위헌이 되었듯이.

12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함께 ‘아무깃발대잔치’를 개최했다. 단체 깃발에 대한 반감은 어느덧,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갔다. ‘장수풍뎡이 연구회’로 시작된 깃발들은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보도 이후 ‘고산병연구회’로 이어졌다. 재치와 유머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백만 명이 머물던 장소는 사람이 빠져도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 자발적인 청소 봉사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광장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시민들은 책임감을 나누어졌다. 서로를 배제하지 않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귀 기울였다. 난장 같았던 사전 마당들. 공연이 있었고 전시가 있었다. 다양한 서명전과 캠페인이 있었다. 서로간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박근혜가 싫어서 나왔을 뿐인데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 세상을 배웠다, 는 목소리가 들렸다. 광장은 자체로 민주주의의 몸을 진화시켜나갔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고, 그 힘은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비좁은 지하철을 통과하면서도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던 손길들이 만든 시간이었다. 탐욕으로 더럽힌 사회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한 이들의 시간이었다.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했던 이들이 주인이었다.

##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촛불광장에 선 시민들은 행복했을까?’ 아니 더 정확한 궁금증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23번의 촛불을 통해 최고 권력을 끌어내렸고, 감옥까지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없는 박근혜 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되었다. 황교안과 같은 공범자가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 나갔고,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변화했는가, 변화를 시작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성이고 있다. 촛불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지만 대선 기간은 어땠을까. 새정부 들어서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을 평가하는 것조차 낯은 시간인 듯한 속도감이다. 그러나 아직 촛불시민혁명은 진행중이다. 탄핵기간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새정부의 시작과 앞으로 요동칠 정치일정 모두가 그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촛불혁명이후 바로 시작된 대선은, 촛불광장의 에너지를 기존 정치 공간으로 협소하게 소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급속도로 대선국면

으로 넘어갔다. 직접민주주의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에게 집중하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1700만이 모인 광장이라고 하지만 개혁입법은 '세월호선체인양법'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18세 선거권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이 모두 국회 앞에서 멈췄다.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방해와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침묵 속에서 실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었다. 대선 기간 홍준표로 대변되는 극우정치 세력은 막말과 혐오정치를 기반으로 세를 구축했고, 박근혜 탄핵 반대 의견 25% 만큼의 표심을 얻는데 성공했다. 촛불동안 숨어있던 샤이 보수 표들의 등장은 대선 국면 내내 우향우 대선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철수는 오히려 사드반대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당은 당론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파는 전체 대선 판에 영향을 끼쳤다. 대선토론 과정에서 홍준표의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입장을 다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 후보로서 적합한 의견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시민 다수는 늘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 탄핵의 시작이 그랬고, 그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밀양과 강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성주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퇴진투쟁 과정에서 촛불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은 소중하다. 이러한 힘과 열정의 결과물을 현실 정치에 모두 담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일상으로 옮겨올 것인가. 증강현실게임이라고 불리는 포켓몬고는 거실과 거리에 피카츄가 뛰어다닌다. 현실이되, 실제하지 않는 현실이다. 마치 지금의 광장이 그런 것이라면, 증강현실게임이 아닌 진짜 현실의 변화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일상의 조직하는 방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87년 항쟁으로 정권조차 바꾸지 못해서 실패한 미완의 혁명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과 다른 87년 체제의 힘으로 3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2017년 촛불 항쟁은 이미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인정하던 하지 않던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승리를 경험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 힘. 바로 변화의 힘. 지금 당

장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반상회를 찾아가고, 노조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후원하고, 독서 모임과 영화모임을 만들자.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자. 그런 고민과 이야기와 모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박근혜가 주어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주어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 혁명은 지금 다시 시작된다.

경남시국회의의 촛불에서 자신을 전기공이라 밝힌 20대 청년노동자는 말한다. “박근혜는 없어지겠지만,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서 가던 청년은 또한 말한다. “광장에 오면 모두 동지고 친구고, 에너지도 넘치고 행복한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나는 다시 20대 청년백수가 됩니다. 광장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광장의 조증과 일상의 울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꽤 되었다. 모두가 주인이 되었던 광장처럼 자신

이제 정말 해야 할 질문은, 그래서 우리 삶은 변화할 것인가?

발제 2.

## 광장을 이어갈 인권운동의 도전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광장을 이어갈 인권운동의 도전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1.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던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이루어 냈고 이어진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수십 년 간의 적폐가 쌓인 한국사회를 뒤튼 시간대에 이어 다시 체제가 재구성되어가는 시간대로 접어들 것이다. 촛불의 광장에서 제기되었던 과제들이 고스란히 제자리인 지금, '정권교체'가 촛불이 이루어 낸 변화의 전부인 듯 환호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때다.

2016년 광장의 촛불과 2017년 박근혜 파면이라는 정치적 경험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보수언론이 가세해 정권을 흔들기 시작한 이후, 퇴진-탄핵 국면을 겨우 쫓아간 야당은 경선-헌재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를 시작했고 이때 선점한 고지를 대선-검찰 국면에서 지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동은 80년 민중항쟁 이후 이어진 87년의 경험과 여러모로 다르다. 경제구조가 달라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운동의 지형과 조건도 다르다. 당연히 결과도 다를 것이다<sup>1)</sup>. 역사를 반면교사 삼되, 현재를 직시하며 한 발 내딛어야 할 때다.

대선 결과를 촛불의 한계나 정치세력의 한계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욱 많아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체제의 더욱 근본적이고

1) 87년 직선제를 요구하는 항쟁은 그해 겨울 노태우 정권의 수립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수립이 항쟁의 모든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았다. 87년의 정치적 경험은 수많은 운동과 조직들로 이어졌다.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웠던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들, 지역마다 품고 있던 학살의 기억들을 책임자 처벌의 역사로 새로 쓰기 위한 운동들이 시작되었다. 8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자 대투쟁은 해방 이후 줄곧 어용이었던 한국노총에 대적하며 전노협운동에 이어 민주노총의 건설을 이루어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같은 대중조직들이나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직능단체들이 폭발적으로 결성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등장을 포함해 한국사회는 '시민사회'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와 같은 힘들로부터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87년의 정치적 경험에 대한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동적인 정치적 국면에서 체제를 넘어설 힘을 충분히 조직하지 못한 운동의 현재를 살피며 과제를 찾아야 한다. 2017년이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 운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촛불의 배경이었던 한국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되짚어보면서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밝혀보려고 한다.

## 2. 한국의 인권 현실과 전망

### 1) 한국의 인권 현실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토론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인권현실을 짚어보겠다.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작성한 UPR보고서와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종합한 100대촛불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핵심 열쇠말을 꼽고 분류해보았다<sup>2)</sup>. 광장을 일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일상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세계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내는 말들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상을 강요하고 있을까? 광장의 열기와 사뭇 다른 일상의 냉기를 훑어보겠다.

### #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회,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동료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10년의 역사는 대선 기간에도 반복되었다. 2016년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성소수자들이었다. 그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무산시키는 혐오세력에 밀려 평등을 선언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인권현실이다.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균형법

---

2) 권리의 목록별로 과제를 뽑아 나열하거나 운동의 영역별로 실태를 설명하다 보면 인권현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이라는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본다면, 여러 인권 과제가 맞물려 있음은 당연하다. 여러 구조적 모순들이 어떻게 맞물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한 때다. 대중의 힘을 조직하며 운동 간 연결과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색출과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는 여러 소수자 집단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행위를 정당화하는 외국인보호제도, 체류기간이 지나 미등록 상태가 되는 이주아동, 출생도 등록하지 못하는 난민 아동, 사실상 강제노동을 제도화하는 고용허가제 등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들도 많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청소년 참정권 문제 역시 다양한 집단을 동료시민으로 여기지 못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견 진보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여성차별이 여성혐오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으며 낙태죄 등 여성억압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감각을 허물고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 # 일 없어서 힘들고 일해도 힘든 사회, 즐겁게 일할 권리를!

OECD 중 근속년수는 가장 짧고 노동시간은 가장 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여 1천만 명에 이르고,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나라.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단시간, 초저임금 일자리에 삶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이 급증하지는 않지만 신규 취업 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이 노년층에 몰리면서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일의 조건에서 성별 격차도 심각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5% 수준이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도 어디냐며 열악한 노동조건이 방치되고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 300만 명을 포함해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20%로 추산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현실도 후퇴하고 있다. 쌀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노동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여전한 노점상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로 지속이 어려운 자영업 문제 등 누구도 즐겁게 일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 # 각자도생하라며 권리를 빼앗는 사회, 모여서 대들 권리를!

먹고살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위기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위기를 개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뭉쳐서 싸우지 못하게 법제도로 옥죄고, 경쟁을 부추기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0%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결사의 자유 현실의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된다.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안정노동이 여러 고용관계 유형으로 다변화되면서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정부가 불법화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이 무노조를 고집하고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 파괴 전략이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단계 하청계열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싸우기 어려운 현실도 변화가 필요하다. 파업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및 손배 가압류 관행도 만연하다. 노동조합만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사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참여하는 것이 촉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 이후 제기된 다양한 국민 참여 제도들도 과제일 것이다.

## #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집회 금지 권한으로 제한당하고 있으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서도 확인되듯 경찰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기간의 표현의 자유, 최근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검열이 말할 권리를 옥죄고 있다. 언론지배구조의 문제로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지 오래다. 한편,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감시와 사찰의 문제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 핵심 악법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이다. 양심수를 양산하고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도록 흔들리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면서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표현의 자유를 불온한 것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근간을 두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정원이 건재하고 있으며 간첩 조작 사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 # 힘 없으면 억울한 사회, 정의를 이룰 권리를!

검찰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되려는 커녕 권력의 편에서 부정한 권력의 재생산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기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딘 칼날을,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뒤서라도 처벌하는 데에 급급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의 문제만은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인 법원 역시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데 길들여진 탓에 정작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해왔으며 국회 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진상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건들이 청산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요한 과제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생명과 안전을 해친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가 되도록 변모해야 할 것이다.

## # 목숨 내놓고 살라는 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박근혜 정권 내내 탄압당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인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참사, 경주 지진 등을 거치며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거듭 확인되었으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는 시작되지 못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등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를 비롯해, 메탄올 실명,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과 안전이 가장 위협당하는 곳이 일터이기도 하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이고, 정부 통계로만 매년 2,3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구의역 참사나 최근의 삼성중공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도 모두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 # 가족 등골 빼먹는 사회, 더불어 보살필 권리를!

주거, 교육, 건강, 보육, 사회보장 등은 모두 인권의 중요한 목록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극히 미약한 채로 모든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데에 익숙해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신청했으나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양의무자제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에서조차 가족이 일차적 부양 책임을 져야 하니 다른 영역은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지 않은 채 시설수용정책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로 보내지고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공공병원은 약 10%, 공공주택은 5.5%, 고등교육 정부 재원 비율은 32%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이 가계를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가계 대출로 빚 권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사회권 실현을 위해 시장경제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권 실현의 기초가 된다. 사회권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 권리로 여겨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 # 전쟁에 갇힌 사회, 평화롭게 살 권리를!

사드 배치에 맞서는 투쟁이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정 지역 주민의 권리를 국가의 이름으로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지만 ‘북한’과 ‘전쟁 위기’가 여전히 인권침해의 이데올로기로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매년 평균 100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등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군 인권 문제, 연간 약 600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고 있지만 도입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 문제 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한미 일동맹 종속 경향을 만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피해자의 권리를 거래하며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이 ‘인권’을 매개로 강력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지 못한 채 한반도 정세를 더욱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 2)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인권현실의 전망

문재인 정권에서 앞서 살펴본 인권현실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는 다소 이른 시점이다. 집권 초기에 공약의 실현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 변화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곱씹을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있다는 점, 당선의 배경으로 촛불의 힘을 업고 있다는 점 등은 오래 묵은 과제들의 개혁에 긍정적 기대를 걸게 한다. 상당한 부분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유예되거나 후퇴했던 개혁 과제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권 현실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첫째, 한국사회가 놓여있는 조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이라는 정치적 퇴보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촛불의 직접적 계기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였지만 그 배경에는 먹고살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나 지적하는 바다. 재벌의 막강한 권력이 유지되면서 경제위기의 부담이 힘없는 개인들에게 전가 되어왔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 기조가 이런 현실을 고착화시켜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다. 자본의 이윤 창출이 한계에 이르면서 한동안 금융세계화로 지탱하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안정노동, 소득 양극화, 복지의 후퇴 등이 가속화되고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예상케 하고 있다.

오바마를 비롯하여 국제금융기구도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반전을 꾀하고 문재인 정권 역시 이와 같은 기조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의존적인 한국경제가 크게 물려있는 미국-중국이 전지구적 패권 경쟁의 양대 축이라는 점, 재벌 집중도가 심각하여 중소기업이 거의 질식당한 상태라는 점,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재정 확충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 등은 여러 난관을 예상케 한다. 경제위기란 결국 자본-노동 관계의 재생산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지만 ‘성장’ 위주 담론의 한계도 남는다. 사람답게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적 접근에 한정될 수 없다.

둘째, 전세계적 경제 위기와 맞물려 제도정치로 수렴되지 못하는 대중의 분노가 혐오를 통해 극우 정치세력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결집을 시작한 신보수세력이 일부 개신교 집단의 성소수자혐오를 매개로 세를 다지고 있으며, 탄핵 국면에서는 태극성조기를 든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파면과 문재인 당선으로 제도정치는 다소간 안정될지 모르나 대중정치의 지형은 앞으로도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문재인 정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제도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여러 제도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으며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시민권의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동등한 시민으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소수자 배제와 타자화를 통한 혐오의 정치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혐오세력이 다른 여러 개혁 과제의 발목을 잡는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은 노무현 정권 시절만 돌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그 힘이 훨씬 더 세력화되었다.

셋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주적’ 논란이 있었던 바, 분단의 현실은 한국사회의 개혁에 큰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실패하면서 한국사회는 철지난 ‘반공’으로부터 결별할 기회를 잃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안세력이 다시금 활개를 치고 대중적으로는 ‘종북’ 혐오가 확산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내건 바 있다. 공약만으로 한계를 미리 재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7조 폐지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3)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평등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지형을 살필 필요가 있다. ‘혐오세력’으로 통칭되기도 하는 보수우익 진영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운 뉴라이트 그룹이 시초였다. 비슷한 시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이 세 확장을 모색하던 중, 노무현 정권의 4대개혁 과제 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아내면서 세를 다지고 보수정치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즈음 인터넷에서는 ‘일베’로 상징되는 혐오표현이 번지기 시작했고 오피라인에서는 어버이연합, 바성연, 엄마부대봉사단 등 행동에 나서는 그룹들이 등장한다. 크게 네 흐름으로 일별할 수 있는 이들 세력은 다소 다른 정치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했지만 한국사회의 진보를 부정하는 반개혁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베에는 자신이 올렸던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이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한국사회에서는 제도정치 안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현재로서는 ‘반동성애’를 이념 수준으로 신봉하는 개신교 세력과 태극성조기를 들었던 우익 대중단체들의 움직임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뿌리깊어 보인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드러난 바 더불어 민주당 역시 반공과 증북혐오를 내면화하고 넘어서지 못했다. 홍준표의 득표에서도 확인되었듯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힘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반공 체제 청산의 과제도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인권의 과제들에 진전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제가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을 모아 넘어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리한 비판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해방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한 발 내딛는 것이다. 개혁의 가시적 성과의 뒤안에서 한국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고 있는지,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더욱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권력을 누리도록, 더욱 저항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더욱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보편적인 시민일 수 있도록, 인권운동의 도전이 펼쳐져야 한다.

### 3. 한국의 인권운동

광장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도전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인권운동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디쯤에 위치해있는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인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인권운동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현재의 위치를 가늠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진보적 인권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sup>4)</sup>.

---

4) ‘인권운동’이 무엇인가 자체가 쟁점일 수 있다. ‘인권’운동만 인권운동이 아닐 뿐더러, 한국의 ‘인권’운동에는 여러 흐름이 있다. 조효제는 <인권의 지평>에서 “중립성, 불편부당성, 비당파성, 비정치성을 강조”하는 인권운동이 구조적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경향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인권운동은 이와 다른 흐름을 만들어오기도 했다. 조효제 역시 이 점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 흐름이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분명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함께 토론하는 운동들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부분은 인권운동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

## 1) 진보적 인권운동의 형성

한국의 인권운동이 ‘인권운동’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로 평가된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인권운동들은 90년대 말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는 명명을 통해 운동의 전망을 밝히고 전략을 세우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진보적 인권운동은 “인권운동은 진보운동이(어야 한다.”는 신념이자 도전이었다. 이때 ‘진보’는 사회가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는 막연한 희망은 아니었다. 세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간해방의 가치관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맥락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인권이 체제를 미화하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체제 내로 가두지 말자는 제안이었다<sup>5)</sup>.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진보적 인권운동의 형성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김대중의 공약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인권이 제도화되는 포문을 열었다. 여러 인권 의제들이 ‘인권’의 언어를 통해 훌쩍처럼 퍼져나갔다. 인권교육과 같은 인프라가 제도 내에서도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성소수자, 에이즈, 병역 거부, 청소년노동 등 사회의 여러 문제가 ‘인권’ 의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물론 ‘인권’의 범람과 남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왜곡도 커지면서 ‘인권’의 철학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진보적 인권운동은 “인권체계가 시공을 초월하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특정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회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인권을 발견하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국가폭력을 조사하고 고발했으며, 불안정노동을 확산할 비정규직 입법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 했다.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로 시작한 평화권의 모색이 민중법정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등으로 이어졌고, 신자유

---

진 활동가들과 인권운동의 현재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 5) ‘진보적 인권운동은 김대중 정권의 출범이라는 현실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권 상황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인권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인 요인을 멀리 압도하는 경제위기”라는 진단을 통해,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구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전망했다. 전망은 현실이 되었다.



주의 경찰국가화에 맞서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투쟁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결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2) 진보적 인권운동의 전개

이명박근혜 정권은 인권운동에도 큰 시련이었다. 인권의 상식과 같은 것들이 공공연히 부정당했고, 여전히 한국사회가 보수반공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이 확연해졌다. 앞선 시기에 형성된 진보적 인권운동은 고유한 인권의제들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통일적이거나 기동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눈앞에 터지는 부당한 사건들에 대응하느라 과로와 피로가 반복되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인권’의 언어만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앞선 시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인권운동만의 한계는 아니었다.

진보적 인권운동이 주창될 때 서준식은 “노동운동을 중심축으로 한 진보세력의 완전히 새로운 통일전선체가 생겨야” 하며 인권운동이 “대중조직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고 이 통일전선체 결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헌신에 앞서 노동운동 자체가 흔들리고 전선에 설 운동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대중조직과 직능단체,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긴 노력 끝에 민주노총이 창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닥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은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에 난항을 겪으며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지 못한다. 87년 이후 확장된 시민사회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제도화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힘을 모으면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거나 조직하는 데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겠다고 총체적인 변화를 밀어붙이는데 운동들은 부문별로 의제별로 대응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으며 성과를 내기도 했던 진보 정당운동 역시 분화와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2008 촛불이나 2011 희망버스 등 기존의 운동으로 포획되지 않았던 대중의 힘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인권운동이 후퇴했다고 평가할 이유는 없다. 사회운동 전반이 위축되고 탄압당하며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모든 운동이 그랬듯 인권운동도 치열하게 시대에 맞서왔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권운동이 일궈온 변화는 무엇인지 짚어볼 때 인권운동의 전략 모색도 가능해질 것이다.

### 3) 진보적 인권운동의 현재

진보적 인권운동이 주창되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인권운동은 분명히 성장했다. 인권 조례 제정 등 인권의 제도화는 여러 우려를 안고 있지만 지역에서 작은 인권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 ‘인권’단체들은 양적으로 많아졌다. 인권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 단체들이 많아지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고 “비틀린 인권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 인권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 연구활동가나 학자들도 양적으로 늘어났다.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이나 국제연대를 위한 역량도 확대되었다.

장애인운동은 이동권 투쟁과 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았고, 무엇보다도 성소수자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 역시 꾸준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대중운동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장은 아니더라도 변화가 있다. 사회권 영역에서 주거권 등 의제들이 발굴되고 여러 운동으로 뻗어나갔다<sup>6)</sup>. 장애운동 역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과 탈시설운동의 전면화 등으로 반빈곤운동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정보인권, 인터넷 감시 등의 인권의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형성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반차별운동의 형성이다<sup>7)</sup>. 소수자인

6) 진보적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계속 외면할 때 진보에 역행하게 될 위험을 인식하며 사회권을 강조했다. 이 명박 정권 시기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복지국가 논쟁이 사회적으로 점화되었으나 인권운동의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생존권의 요구를 사회권을 통해 체제내화했던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들이 소개되고 일부 이식되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사회권 또는 사회적 시민권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사회권’이라는 언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7) 소수자 인권과 차별의 문제는 진보적 인권운동의 시야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 당시에도 토론의 쟁점이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무산된 후 반차별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추상적인 자유주의적 구호가 절대 말해주시 않는, ‘내가(우리가) 어떡

권이 권력의 시혜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면서 제한적 시민권의 승인에 갇히지 않도록 반차별운동의 담론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운동들과 연대하고 결속하는 흐름을 만들어왔다.

인권을 자신의 운동에서 주요한 가치로 삼는 운동들도 많아졌다<sup>8)</sup>. ‘진보세력의 통일전선체’가 지금도 여전한 과제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권운동은 최근 박근혜 퇴진국민행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운동 전반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데에 헌신해왔다<sup>9)</sup>. 여러 운동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 연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교훈은 새삼 환기될 필요가 있다.

뿔뿔이 흩어진 채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인권운동은 조금씩 진전해왔다. 서로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운동더하기’로 이름을 바꾸어 연대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거나 규모로 승부를 거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없는 인권운동은, 느슨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수성의 유대를 통해 서로에게 든든한 길벗이 되어왔으며 때로는 힘을 모아 난관을 돌파하기도 했다. 사회운동 전체를 조망하되 인권운동의 강점을 살리며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과제를 찾아가야 할 때다.

## 4.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과거만큼 체제의 모순이 간파되기 쉽지 않고 적대는 모호하며 변혁의 담론도 희미

---

한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로 차별금지법에 접근하며 “어떠한 권력과 배제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 8) 비정규노동과 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가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의 문제들에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문제, 청소노동자의 권리 찾기,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안에 함께 하며 노동과 인권이 가까워졌다.
- 9) 인권운동은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거치며 사회운동 안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인권운동이 그간 쌓아온 역량을 총집결하여 운동을 함께 만들어갔다. 경찰폭력이나 사이버사찰 등에 대응하며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지켰고, 반차별의 시선으로 평등한 애도를 위한 활동을 벌이며 민간잠수사나 기간제 교사 문제 등을 제기했다. ‘안전’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가 내세우는 치안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권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인권 감수성의 힘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전하는 구술기록 작업에도 인권운동의 역량이 모였다.

한 시대다. 촛불과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는 나름 변화하겠지만 여러 문제의 토대가 되는 체제의 모순이 어떤 방향으로 변이되어갈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나열적 분석이나 평가로 진단하기도 쉽지 않다. 자본-노동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갈지, 분단의 현실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정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혐오의 정치는 어떻게 변모해갈지, 또한 여러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거나 질곡하며 체제를 구성해갈지는 꾸준히 살피며 가야 한다. 앞선 시대를 지나오며 형성된 저항의 가능성, 촛불의 광장이 남긴 변화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체제에 갇히지 않는 인간해방의 힘으로 조직할 것인가? 이것이 인권운동의 현재에 던져진 질문이다.

촛불의 광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긴 정치적 경험은 제도적 경험이나 단기간의 변화로 선불리 재단될 수 없다. 작년 촛불을 거치며 흔들린 체제의 균열을 품은 개인들이, 체제가 강요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제에 맞서는 일상을 조직할 수 있도록 인권운동의 과제를 찾아보자<sup>10)</sup>. 인간의 존엄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는 존엄을 할당하고 분배하는 구조들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물질적 조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인정’을 둘러싼 관계의 역동을 섬세하게 짚을 필요도 있다. 자력화의 언어, 보편화의 언어로서 ‘인권’이 저항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을까. 각자의 운동이 지키고 있는 소중한 자리들을 서로 응원하는 동시에 인권의 진전을 향해 힘을 모을 방향을 찾아보자.

## 1) 혐오세력에 맞서 평등을 세우자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이래 한국사회에서 평등은 불온한 단어였다.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반공정치가 평등의 가치를 억눌러왔다면 최근에는 제도 밖 혐오의 정치가

10) 87년이 386세대를 남겼으나 노동계급의 형성에는 한계를 남겼듯,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 호명하는 사람들이나 박근혜 파면 이후 자신을 광장의 촛불에 비추어 돌아보게 될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열려 있다. 광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했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음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광장의 경험, 높아진 사드 배치 반대 여론, 재벌의 일방 독주에 대한 경계 등은 앞으로 진행될 운동의 도전에 따라 결과가 확인될 수 있다. 사회를 뒤흔들었던 ‘개인’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전망은 대체될 수 없다. 억압받는 자들의 존엄을 이루기 위해 ‘인권의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지난 3월 인권활동가대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평등을 공격하고 있다. 물론 '중복 게이'라는 말에서도 확인되듯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평등 이데올로기는 뒤섞여 있다. 한국사회는 아직 '평등'을 주류화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술한 개혁 공약에도 불구하고 유보되었다. 당분간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투쟁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법 제정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권운동은 힘을 모아 반드시 문제인 정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광장에서 확장된 민주주의가 누군가의 시민권을 부정하며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이야말로' 필요하다. 게다가 반동성애운동은 성소수자혐오를 양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권'을 공격하는 주요 세력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비롯해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과제다. 현재로서는 혐오를 정면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중요하다.

동시에 현재의 혐오가 특정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나 유럽에서 인종혐오가 강화되는 현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반면 적대는 모호해진 결과, 소수자 집단을 타자화하는 혐오가 대중의 불만을 왜곡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경향이 일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평등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곳곳으로 구체적 변화들이 이어져야 한다.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지역사회로 평등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영역이나 주제를 달리 하는 여러 인권단체들도 각자가 포함된 네트워크를 통해 평등이 번져나가게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국가인권위법에 예시된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되도록 개정한다거나,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이 각자의 활동 속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약속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함께 구상해보자. 평등을 세우는 것은 정권의 과제에 앞서 운동이 자임해야 할 과제다.

## 2) 노조할 권리에 주목하며 ‘노동’에 접속하자

한국 경제가 1997년 이후 지탱된 방식은 자본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대기업의 부담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으로 영세사업장으로 노동자에게로 위기를 떠넘겨왔다. 가계부채로 겨우 경제를 지탱하면서 부채 위기를 겪는 한계 가구가 160만 가구에 이르고 경제는 살얼음판이 되었다. 먹고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의 도전이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 불만으로 잠재해있음은 누구나 지적하는 바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위기 전가에 맞설 수 있는 노동의 조직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sup>1)</sup>.

물론 노조조직률이 낮아지는 현상 역시 전지구적이고 그만큼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은 분명한 진전이 예상된다. 통칭 ‘비정규직’ 문제라 불리는 여러 문제들은 해결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sup>2)</sup>.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조직들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존엄은 앞으로도 사장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신세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의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법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노조가 어려운 이유는 법제도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구조의 변화, 경영자의 노조 회피와 파괴 전략, 친 사용자 중심의 정부 개입 등 여러 요인이 있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이 가진 강력한 권한인 기업별 단체협상이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 향상에 큰 여지를 주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만큼 조직화를 위한 권리의 언어들을 만들고 결합하는 것이 필

1) 해방 이후 독재정권 치하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유하며 한국 사회에 노동자계급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민주노총 창립에 이어 97년 총파업은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체협상을 통해 힘을 강화하는 방식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채, 다양한 형식으로 위기를 떠안게 된 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내하청 투쟁이나 청소노동자 조직, 학교비정규직 노조 설립,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은 극히 미약한 상태.

2) 우회적 정규직화나 정규직 양보론이 쟁점을 흐릴 수 있다. 교육공무직법 제정 시도가 무산되었던 것처럼 대중적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높다.

요하다. 당장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투쟁의 경로를 함께 찾는 동시에 노동자의 조직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도 필요한 때다. 한편, 결사의 자유를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집단을 넘어 다양한 처지의 사회적 약자들이 뭉치고 행동할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어질 필요도 있다. 세입자, 철거민, 장애인, 학생 등 각자가 처한 조건을 바꾸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아질수록 인권 현실은 진보할 것이다.

### 3) ‘인권’의 ‘제도’들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자

국가인권위 설립으로 본격화한 인권의 제도화는 여러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정권에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제도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한 냉소도 커졌으며,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듯 제도화 과정에서 성소수자혐오가 부각되며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진보적 인권운동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인권의 제도화에 인권운동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았다. 차라리 냉소가 문제적일 정도로 거리를 두기도 했으며 제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산발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략적 접근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사회의 압도적인 보수우경화 흐름에서 인권의 제도들에 걸게 되는 기대도 낮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 제도화는 다시금 인권운동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운동 전반이 제도화의 자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우지 못하는 현상도 예측된다. 그간 심화된 운동과 정치의 사법화 경향도 유사한 측면에서 우려된다. 여기에서는 일단 인권운동의 위치에서 필요한 두 가지 고민만 꺼내보려고 한다.

하나는, ‘인권’의 제도들로 시야를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한국의 인권현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인권의 제도들은 다양한 영역에 편재돼있다. 노동법, 학교 성교육, 검찰 개혁, 병역제도, 집시법, 부양의무제, 세월호 특조위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사회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제도들이 인권 현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국가인권위나 지역 인권조례와 같은 ‘인권’의 제도들은 사회적 기능이 다르다. 인권의 언어를 대중적으로 유포하고 인권정책을 생산하여 제도적 영향력을 미치고 침해된 권리의 구제 절차로 기능하는 등 역할이 다른 것이다. 이런 역할은 사회 다른 부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간 국가인권위의 주요한 결정례들이-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사회적 변화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방향의 앞서는 변화들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인권’의 제도들에 대한 전략은 인권운동의 전략이 분명할 때 마련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으로 제도에 접근할 때 인권운동의 힘을 제도에 가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앞선 맥락에서 인권이 ‘제도’들을 운동의 경유지로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가 목적지일 수는 없다. 제도를 둘러싼 투쟁은 요구가 분명한 만큼 운동의 힘을 모으는 데에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sup>13)</sup>. 그런데 제도화 자체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운동이 힘을 남기지 못하고 소진되기만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법제도의 변화를 우회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제도화 일반에 대한 전략이나 전술을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인권현실 전반을 조망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위상을 가늠하고 운동의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토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운동에서 인권기구나 국회, 사법부 등이 싸움터의 한가운데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자. 우리는 대중들의 삶 속으로 이러한 싸움들을 가져가야 한다.

13) 청소년인권운동의 영향 아래서 사회적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 기구를 남기는 등 제도화의 한 흐름이 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계도 확인되지만 여전히 조례와 학생인권기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있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의 인권조례들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었고 국가인권위의 표준안 마련 이후 유행처럼 도입되었다. 경로가 이렇다보니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해가는 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인권조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혐오세력의 인권조례 폐지운동에 맞서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인권의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제도’를 흘려넘치는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 4) 분단과 한반도의 현실을 주시하자

평택 미군기지, 강정 해군기지, 성주 사드 배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인권운동도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국가보안법이나 국정원 등 공안정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북한’에 부딪쳐오기도 했다. 군인권이나 병역거부 등 군사주의에 길들여지는 한국사회에 경고음을 보내는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북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던 시도가 거의 이어지지 못하고 유엔기구의 북인권 공세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탈북이주민의 현실에도 대응하는 단체가 거의 없다.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높는데 여전히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북한의 전쟁 위협을 꼽으며, 국정원 개혁이 가장 크게 부딪칠 난관 역시 북한의 존재일 것이다. 간첩 조작 사건이 점차 탈북이주민들을 향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인권운동은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인식 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인권운동이 주창되던 당시 인권운동의 과제로 제시되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름의 진전을 거둔 반면, 분단/통일/한반도/북한과 관련해서는 제자리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대체로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피해당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구조적 조건에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 인권운동에는 분단과 한반도의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인권현실을 진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 5. 나가며

문재인 당선 이후 아침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문재인 정권이 변화시키려는 세상에서 ‘나중’으로 밀리고 있음을 느껴야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하다. 광장의 열기가 정권에 대한 기대로 수렴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운동이 그것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전망과 함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어내고 드러내려는 인권운동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운동의 과제를 직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 예비하며 사람들의 힘을 조직하기 위함이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저항운동의 체제내화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 그 자체를 파괴한다.”<sup>14)</sup> 박근혜의 파면은 한국 근현대사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일차적 종착지라는 점에서도 확인되듯 빠르게 제도로 순치된 사건이며, 일련의 과정이 지배체제의 제자리찾기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항운동의 체제내화’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체제를 넘어서는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도의 순차적 개혁이나 권리의 법제화가 답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반체제적 구호가 변혁을 담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체제를 넘어서려는 운동도 체제 안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운동의 전략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쟁점들도 많아질 듯하다. 앞으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 다만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토론보다는 멀리 내다보며 일상으로부터 서서히 세상을 바꿀 힘을 조직하기 위한 질문들을 나누는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인권운동의 연대가 지금까지 그랬듯, 서로의 시야를 틔워주고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게 하는 통찰을 나눠주는 관계로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

---

14) 『서준식 옥중서한』의 머리말 중

# 토론

곽이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국장)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곽이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국장

민주노총이 부족함 없이 역할을 다했다고 자평하긴 어렵지만, 이번 박근혜퇴진운동에서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운동의 역할이 중요했다. 2015민중총궐기 이후 한상균위원장 구속 등 광포한 공안탄압 속에서 벌어진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 노동개악 저지투쟁, 백남기농민이 돌아가신 후 이어진 부검저지투쟁, 2016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던 중 일어난 국정농단 사태와 폭발적으로 커진 촛불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분노와 요구를 표출할 장을 열어내는 역할을 했다. 한편,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신감 있는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광장의 가능성을 목도했고, 열린 광장 속에 서서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여럿이었다. 소위 무슨 말만하면 “강성귀족노조”로 비난받는 지금에도 여전히 가장 주요한 과제는 촛불 이후 분명히 달라진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새정부 들어 사회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문제 해결, 노동시간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노조할 권리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간 투쟁의 성과로 성과연봉제 및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 등 박근혜정부 대표 노동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바닥을 쳤던 박근혜정부로부터 조금씩 상식선의 회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열광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의 개혁조치들이 그간의 투쟁의 성과로 하나씩 회복되는 중이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상식의 최저선을 넘어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현하는 일이다. 자명하지만 그것은 새정부의 개혁조치에 기대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힘으로? 촛불광장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힘에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 노조할 권리와 촛불

“노조할 권리”는 대정부 요구인 동시에 우리 자신이 변화할 몫이기도 하다. 난 이 부분이 촛불광장이 일상으로 퍼져나가야 하다는 적지 않은 분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어떤 기회에 청년노동자들과 사업할 기회가 있어 “청년노동자를 조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질문했다. 돌아온 답은 단지 “청년세대”로 구분 짓지 말라는 것.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으면 청년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다”고 했다. “일한만큼 받는게 아니고 힘있는 만큼 받는거더라”라고도 했다. 그는 박근혜퇴진촛불이 한창이던 지난 겨울, 경남 창원에서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라는 질문을 던진 20대 전기공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노조할 권리는 판판이 깨지고 짓밟혔다. 지금껏 투쟁 중인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노조를 만들기 전 나는 태생부터 비정규직인 것 같았다. 그런데 노조 만들고 6개월은 진짜 좋았다. 당장에 일터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게 노조의 힘인가 싶었다.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시장갈때도 조끼를 입고 다녔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같이 시작한 동지들 중엔 떠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못 그만둔다. 노조가 생겨서 좋았던 것을 경험해서.” 지금 사람들은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 어려우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공존하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을 거치는 동안 민주노총에는 노조 가입 또는 조직을 위한 상담이 전보다 팔목 할만하게 늘어났다. 촛불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커졌다. 개별로라도 조합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나 매우 작은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열망은 분명 촛불경험과 자신감에서 기인한 것인데, 스스로를 조직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받아안을 수 있는 구조와 경험을 지녔는가, 망설여지는 대목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노조할 권리 확대는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되었다며 노조 및 단협 무력화 등 노조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왔다. 그러나 노조의 임금불평등 개선 등 공익적 역할은 경험과

연구결과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제도개혁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조직화를 통한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효용감) 축적과 조직화를 위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노조와 관련 단체들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고,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임을 준비하고도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형태로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적인 노동의 제가 아니라도 다양한 의제를 포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면에서 지역의 여러 모임들과 노조가 연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촛불승리 이후 변화한 능동적 주체를 만나기 위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욕구가 여러 곳에서 존재한다. 촛불 이후 스스로를 조직하는 시민, 노동자와 만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우선 단체들이 만나고 토론해보는 건 어떨까?

## 사회적 연대, 그 기반 위에 선 조직

기존 운동에서 인권운동(단체)는 노동, 농민, 빈민운동같은 대중조직과는 구분되고, 특정한 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여타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구분되어왔다. 한편으로는 기존 운동질서와 다른 결을 걸어온 소수자 운동, 또는 관심 밖에 있던 목소리 작고 힘없는, 그러나 그 의미는 작지 않은 의제들을 포괄했다.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운동 등이 당사자들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그간 운동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조직할 운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영역의 요구와 의제를 물 위로 올린 인권운동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노동의제라 할지라도 기존 노동조합운동에서 포괄되지 않는, 또는 그러기 힘든 부분을 인권운동기들이 의제화하는 역할을 했다. 개별 의제 속에 협소해질 수 있는 시야를 넓히고, 서로 연결되어야 온전한 수 있는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과정은 중요했다.

얼마전 만난 성소수자 지인은 오산의 화장품공장에서 계량하는 일을 하며 기숙사에

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전에는 반월공단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MTF트랜스젠더 노동자를 만났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다. 대중조직이 사회적 연대와 인권의 기반 위에 설 때 오히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미 다양한 주체들이 섞여있는 대중조직으로서는 그런 노력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한명 한명이 힘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 꼭 수반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인권운동은 그 조직의 실제적 확장, 가치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노조를 비롯한 조직들은 그런 노력을 내부에서도 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 원칙을 규약 등의 내용에 포괄하기 위한 노력부터, 다양한 내부 모임 조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점점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마인드와 조직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 강성노조로써 할 일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시대의 강성노조로써 해야 할 일은 문재인정부에 기대며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6.30 사회적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물론 다시 한번 광장에 많은 인원을 모이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천명했다. 지금 강성노조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우리가 조직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요구를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6.30은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한 노동자로 살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너도나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며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촛불은 해 줄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확인한 시간 아니었던가.

현재 갑을 노조파괴 변호사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해서 문제다. 갑을오토텍은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유명하다. 경비, 식당노동자들을 비롯한 정규직 비율이 97%에 이르는 좋은 일자리 사업장이었다. 강성노조가 존재하고 강한 교섭력을 통해 외



주화를 막아온 사업장 중 1/3이 노조파괴 사업장이 되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일치했다. 그 외중에 “강성귀족노조론”이 득세하며 오히려 재벌기업들이 약자인양 행세하는 수법이 노조를 공격했다. 기아차정규직지부의 비정규직노조 분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강한 노조가 권리를 지킨다는 점도 분명하다. 어떤 강성노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강성노조 되기, 적폐청산이 하나씩 이뤄지고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크고 거세질 이 시기, 많은 대화와 실천이 오가야할 부분이다.



## 예비(대기)와 유예(나중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 평등한 삶을 향한 반차별운동<sup>15)</sup>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애여성공감)

###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2007년 12월 12일 법무부는 재계 및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셌던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7개의 삭제 조항은 한국사회 시민과 비시민자 위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줬고, 이를 가르는 논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었다.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운동의 주체들은 반차별공동행동(반차공)이란 이름으로 모여 활동을 지속했고, 2010년 올바른 법제정과 사회적 대응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을 결성한다. 반차공과 이를 이어가는 차제연은 담론과 쟁점토론, 법안 구성, 연대를 위한 대중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 이 과정들은 법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한 실패로 보일 수 있으나, 우회하는 등산로를 통해 현장의 일상을 돌아보고, 운동을 성찰하며, 평등을 위한 연대를 새롭게 써나갔다.

- 차별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는 “반차별 상상더하기”: 각 운동의 주제와 현장경험으로써 차별을 질문하고 구성해 왔던 시간들은 반차별 담론으로 운동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다. 반차별공동행동은 다양한 진영에서 제기하는 ‘정상’과 ‘차이/차별’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함께 질문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차이/차별이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다양한 운동을 통해 배워나가며 자신의 운동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가늠해보고 발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올바른

15) 급하게 작성하여 문제의식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논의 역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6)</sup>

-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한 관계맺기, 연결과 교차성, 평등예감 ‘을’들의 이어말하기: 대한문이라는 의미있는 공간에서 반차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단체, 영역 운동을 만나는 자리, 기존 차별/정체성 영역을 넘어서 교차하는 자리의 의미를 가지며 차별과 혐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구체적 삶의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다.

## 2. 혐오의 시대, 차별금지법제정의 의미와 반차별운동

### ① 무엇이 위기가 되는가? 위기의 위계화

- 저출산정책, N포 세대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것들만 위기로 소환된다. 경제위기도 발제자(미류)가 지적한대로 결국 자본-노동관계의 재생산의 위기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소수자는 언제나 위기였음에도 위기로 호명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위기의 원인으로 내몰린다.

### ② 거리가 먼 ‘표준’의 삶, 실패의 경험과 불안이 만드는 혐오의 정치

-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자기착취, 유연화 전략은 사람들을 조직되지 못하게 한다. ‘혐오야말로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감정, 나와 다른 사람을 편 가르게 하는 것, 타자의 동화, 연대를 불가능하게 한다.’<sup>17)</sup>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분노를 집단화 시키는 지형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다. 혐오라는 감정을 만드는 것은 구조적 차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국민국가는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면서 끊임없는 규범과 범주를 공식화시켜, 제도를 통한 윤리와 정서의 형성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여성/남성, 장애/비장애, 자국민/이주민, 이성애자/성소수자, 성인과 청소년, 정상가족/비정상가족 등 범주화하여 관리하면서 구분과 차이를 자연화 시키는 방식의 통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말은 일면 맞지만 차

16)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반차별공동행동 2008 두 번째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입법운동의 전망’ 장애여성공감 발제자료.

17) 손희정, 『여/성이론』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2015 참조.

이를 본질화 시킬 수 있는 함정도 있다. 이는 발제자(미류)도 지적한 것처럼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추상적인 자유주의적 구호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접근하며 “어떠한 권력과 배제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시화하는 작업”은 중요해 진다.

### ③ 차이라는 말을 통해 유지되는 억압과 이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기

- 차이에 대한 도전 ‘여자라서’, ‘장애인이어서’, ‘외국인어서’, ‘에이즈 감염인이어서’ 라는 말은 ‘차이’를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 차별의 구조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 기능적인 말이 된다. 각 운동의 고유한 이슈를 갖고 있는 각 단위들이 모여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운동에 대한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은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던 인권운동단체들이 다른 단체에서 제기하는 ‘정상’과 ‘차별’의 문제를 자기 운동의 질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이다.”<sup>18)</sup>

## 3. 차별금지법제정운동, 국가와 관계 맺기와 거리두기

### ① 국가, 관계 맺기와 거리두기

- 발제자(미류)는 차금법 제정무산과 동료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며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감각을 허물고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과 비국민에 대한 구분은 결국 ‘동등한 인간’이라는 위치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권자 국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고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차금법 제정은 평등한 세상을 내다보게 하는 또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으며, 차제연은 하반기 입법청원활동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국회 압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그러나 국가의 제도와 권리로써 구획된 삶을 거부하고 인권의 가치가 구현되며, 다른 삶에 대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의 국가와의 거리두기와 도전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법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면서도 법과 싸우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기도 하다.

18)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 한울, 2010.

## ② 차별받는 피해자의 위치를 넘어, 차별에 맞서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 선언하기

- “법으로 규제받기 위해 법의 언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성폭력피해여성’, ‘장애인’,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은 법의 한계적 언어 안에서 자신의 피해/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피해가 근본적인 법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sup>19)</sup>

## ③ 운동의 제도화를 경계하기

- 여성운동이 양성평등이라는 제도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싸운 과정(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 요구 철회 촉구 대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다시 치료와 재활 프레임으로 포섭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와 긴장

- 차별금지법 또한 제정이 되었을 때 국가에게 보호를 요구하고,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엄벌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때 법제정 운동이 목표한 바와 멀어지며, 차별금지법이 국가폭력을 감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가를 절박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sup>20)</sup> 결국 반차별운동, 우리의 싸움은 제도화로 완성되는 싸움이 아니라 투쟁을 갱신하기 위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 4.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 반차별운동으로 평등의 연대 그리기

① 발제자(미류)의 제도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여러 제도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으며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발제자(박진)이 말한 광장의 조증과 일상의 울증에 대한 격

19) 반차별공동행동, <반차별횡단열차자료집>, 2009.

20) 나영정, <강남역 1주기 집담회> ‘퀴어-장애정치학으로 젠더폭력 대항하기’

정은 일상의 광장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② 입법운동으로 동력을 모으고, 담론을 쌓고, 대중캠페인과 연대활동을 배치하는 차제연의 2017년(이 계획은 5월 25일 차제연 기지개 워크숍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총 105개 단위들의 현안과 문제의식, 목소리를 모으고 조직화하는 전체회의와 워크숍

- 노동조합의 규약에 국가인권위법에 예시된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되도록 개정한다거나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각자의 활동 속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약속들을 만드는 작업(발제자 미류)
- 새로 등장한 단위들이 결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 지역인권조례 폐지 대응: 지역 인권조례 연결하는 것을 허브역할과 지역 간담회로 공동대응과 연결을 고민하기

③ 예비(대기)와 유예(나중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

- 차별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맞서, 무임승차가 아닌 삶에 대해 말해야 한다. 무엇이 불평등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이 무엇인지, 새로운 삶에 대한 영감은 구체적인 현실과 관계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 나중예를 반대한다: 미래에 현재를 빼앗길 수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 교차성의 정치와 연대의 장에서, 소수자운동과의 만남을 통한 규범과 경계자체를 질문하고 재구성하는 연대 : 차별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다양 한 해방적 정치학이 연루되고 상호 개입할 때라야 복잡한 역사와 구조와 체화된 경험 속에 녹아있는 차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항도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sup>21)</sup>
- 사안들 속에서 구체적인 차별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표준’의 삶을 강요하는 관계 맺기의 좌절로 국민을 내몰고 있는가? 균형법 92조 6이 가져오는 성적자기결정권 후퇴, 집단 거주생활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어떻게 만나는가?

21) 나영정, <강남역 1주기 집담회> ‘퀴어-장애정치학으로 젠더폭력 대항하기’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I. 촛불항쟁의 의미와 쟁점에 관한 소고<sup>22)</sup>

도대체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은 무엇이였을까?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과 성격은 무엇이였는가?, 무엇 때문에 촛불은 이토록 뜨겁게 타오른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진(탄핵)당한 것일까?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

승리한 싸움이었다는 온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이제 시작이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중단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지의 선언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쟁점들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임.

####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이례성

대통령의 최측근비리는 문민정부 이후 반복되었음. 김현철, 김홍일·김홍압·김홍걸, 노건평, 이상득 모두 현직시 구속, 부패비리의 구조는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함.

유사가족(최씨집안)이라는 자극적 요소와 검찰 통제 바깥의 증거들(태블릿 pc등과 비망록 등)의 출현, 정권 내내에 전방위와 전기간에 걸쳐있던 게이트의 특이성이 가

22) 1. 탐의 내용은 본문은 필자 개인의 입장으로 민변 퇴진특위 백서(간행중)에 담길 원고의 요약·발췌본입니다. 작성 시점이 4월초였다는 점을 감안.

졌던 휘발성

## 2. 촛불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뜨겁게 타올랐을까?

### 1) 근본적 분노?기저요인?

-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심판
- 청년세대의 특별한 분노와 참여
- 안전에 대한 열망

그러나 세 가지 요소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었거나, 환원해서 설명하기 어려움. 경제위기 담론이 널리 퍼지지 않았음. 청년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도 아니었음. 안전도 광우병·세월호 촛불이 있었음. 이러저러한 분노의 증층적 누적이 승화한 광장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움

### 2) 사회운동·인권운동의 대응. 무엇이 달랐고, 무엇을 잘하였는가

- 촛불이 가장 큰 역할을 함
- 기존과 달리 부패 문제 부각에 성공.

- 종전에는 불충분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특검으로 봉합되었고,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봉쇄

#### ○ 퇴진 구호의 실질화

- 문민정부 이후 퇴진 구호는 형해화되었음.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다른 차원이었음

#### ○ 사회운동의 역할

- 2002년 촛불 이후 사회운동은 촛불집회 문화제의 준비자이나 전체 운동의 진로를 모두 제안하거나 감당하는데 다소 부족했었음. 그러나 이번 '퇴진행동'은 비교적 성공. 다양한 특위의 활동. 운동의 이질성 등이 드러났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기획

### 3) 운동 외부자들의 변화

- 주류언론의 입장선회 (무엇을 함의하였는가?)
-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
- 주요 야당의 소극적 태도(질서있는 퇴진)는 촛불에 의해 견인
- 법원, 검찰, 경찰의 다소 변화된 자세

평화시위는 왜 가능하였는가?(법원의 판결, 경찰의 수세적 정무적 변화),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발현되는 검찰의 유의미성이 특검을 통해서 부각

### 3. 퇴진에서 탄핵으로

- 탄핵의 의미

‘정치의 사법화’의 정점인 ‘탄핵’을 사회운동 스스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선택에 대한 음미. 헌법안의 진보?

### 4. 탄핵을 통한 촛불의 성취? (주류적 평가에 대한 의문)

- 헌법 제1조의 현실화? ↔ 말그대로 탄핵은 공화주의적 방식. 여기에 민주와 민주사회는 어디에?
- 4.19혁명/87년 6월항쟁/세번째? ↔ 정권교체 등으로 의미가 축소될 우려 또는 현실
- 박정희 신화의 종말? ↔ 박근혜없는 박근혜 체제 지속의 가능성 경계

2016·2017 촛불항쟁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고, 정권의 위기에 대하여 ‘질서있는 퇴진’으로 수렴시키려고 했던 보수분파의 기획도 분쇄했다는 점에서 ‘승리’한 싸움.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체제의 구조, 일상의 민주주의가 구축되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 지속되지 않는 한, 기성질서의 무능과 균열을 틈탄 일시적 우세로만 기억될지도.

바꾸고 싶은 사회로의 이행이 촛불항쟁과 박근혜 정권퇴진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없다면, 촛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발본적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5. 촛불의 난점

### 1) 의제 확장성의 차단

언제나 촛불이 출현했을 때마다 최초의 의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될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확산은 언제나 실패. 차이가 있다면 이번 촛불이 퇴진구호라는 보다 정치적 목표를 슬로건으로 삼았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결과적으로 특검법을 제외한 어떠한 개혁입법과제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

### 2) 촛불과 사회운동의 관계

촛불이 등장이후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회운동의 역할론에 관한 의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체들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블록,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표상되는 민중운동 블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 인권운동단체연석회의으로 표상되는 인권운동, 복수의 진보정당 운동, 다양한 풀뿌리운동 단체들 등) 비록 촛불(문화제)을 ‘형식적으로 기획’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역할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지만, 그 이상을 기획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역량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거리의 정치(촛불)과 제도의 정치(정당) 가운데 서 있는 사회운동은 그렇다면 어디서 쇠신과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까? 사회운동의 일익으로서 민변이 자리한다면 함께 새겨보아야 할 질문

### 3) 정치적 주체화·조직화?

촛불의 주인공들은 점차 늘어났지만, 그 촛불의 목소리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을 의미하거나 새로운 조직의 확장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역설. 다시 말해 촛불은 언제나 광장이었을 뿐,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축제였을 뿐 혁명일 수 없었

다는 오래된 평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7·8·9 노동자대투쟁에서 드러났던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성과와 비교하자면 그 차이가 더욱 부각

이번 촛불항쟁 과정에서 사회운동에서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민의회’ 또는 ‘시민권리선언’의 기획이 기획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촛불이 사회변화의 어떤 가능성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해방의 언어와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더 달릴 수밖에 없음. 이점이 촛불을 쉽게 시민혁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기도.

## 6. 촛불항쟁이 남긴 법에 관한 두 가지 쟁점

### 1)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박근혜 게이트와 그에 대응하는 촛불 과정에서 ‘헌정 질서의 위기’가 드러난 국면이 있었고, 이를 넘어서 고자했던 인민주권의 자기해방적 운동이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개시. 그런데 촛불은 헌법 너머까지는 이야기되지 못함. 결과적으로 촛불이라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인민주권의 운동이 헌정주의 질서 안에서 제약당한 것.

그렇다면 이 긴장을 발전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할 수 있는 경로로서 더 민주적인 헌정질서의 구축을 외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특히 탄핵절차를 경유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취약, 대통령 탄핵시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결핍과 같은 현행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현재의 헌정질서를 더 민주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아닐까?

아울러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은 ‘대의제’와 ‘거리의 정치’라는 대당으로도 표출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 예컨대 대의제가 충분히 합목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교정하고 견인하는 역할로서 ‘촛불’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필요한 것은 ‘촛불’이 아니라 ‘정당’을 균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주장이 되풀이 되어왔음.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구조적 한계·제약들

에 관한 지적을 외면할 수 없음. 대의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선출된 자들이 대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현재의 정당질서 및 선거제도가 국민의 다종다기한 목소리들을 온전히 담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체제로 경제(법)단위가 통합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당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음. 아울러 현대국가에서는 의회에 비하여 행정부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추세도 간과하기 어려움. 오히려 그렇다면 촛불과 같은 인민주권이 보다 더 확장하면서 대의제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발의와 소환 등으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하는 것은 아닐까?

## 2) 촛불항쟁에서의 법동원 현상-특히 민변

법의 지배가 확산되면서 사회운동의 법동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법운동, 공익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등이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활동양식으로 자리 잡아옴.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항쟁 국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짐. ‘특검’과 ‘탄핵’이 주요한 사법적 수단으로 채택되었고, 특검이 왜 필요한지, 특검의 수사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탄핵이 왜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전문가적인 조언도 필요했던 상황. 이 상황에서 민변은 박근혜 게이트와 탄핵, 촛불과정에서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

그러나 탄핵·특검 등을 거치면서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던 사회운동의 법동원 현상과 민변의 역할에 어떤 후과는 없을까? 혹시 우리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심판을 친박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심판으로 축소시킨 것은 아닐까? 사실 지배계층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부패비리를 사법적 수단을 통해 규명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일지도. 사법기관은 현재의 주요한 지배원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법 논리 내에서의 ‘일탈과 남용’을 규제할 뿐. 그런데 탄핵과 특검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해결방식이 전면부각되면서 은연중에 구조화된 부패 사슬과 총체적인 모순은 내버려 두게 된 것은 아닐까? ‘박근혜 게이트’의 문제가 개별 기업과 특정 세력의 ‘불법행위’라는 문제틀로 축소된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정치

의 공간에서 촛불시민의 능동적 개입이 확보되기 보다는, 정서적 대리만족에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회운동의 법 동원 현상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 법률가에 의한 지배로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역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일도양단의 정답은 없겠지만, 법을 통한 사회변동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경향성은 더욱 커져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긴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임

## 7. 소결

결과적으로 2016·2017 촛불을 경유하면서 사회운동이 다시 확인한 과제가 있다면, 최저선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질문들을 발굴하며 쟁점을 확산시켜나가는 역할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 이러한 긴장과 준비 없이는 촛불 이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음. 촛불항쟁에 대한 평가가 '승리적 평가'로 끝날 수 없고, 무언가가 촛불과 사회운동 그리고 우리사회에 과제로 남겨짐.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출발점에 서 있음

## II. 새로운 정부 초기 운동의 대응전략에 관한 개인적인 고민들

### 1. 정세

#### 1) 위기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사회·노동·평화·교육·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새로운 정권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심판 및 현재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사안해결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이라는 두 가지 궤도의 문제에 당

면하고 있음

## 2) 대선을 경유한 이데올로기적 지형

이번 대선에서는 17대 대선 '최다 표차' 기록 경신. 문재인 당선자 얻은 표는 1342만3800표. 홍준표는 785만2849표. 557만951표 차이. 한 편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1469만2632표를 얻은 것에 비하면 126만8832표를 적게 얻었음. 대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201만7458표(6.2%)를 얻었음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근혜정권 9년 이후 제도의 정상화라는 효과. 2003년이 아니라 1993년 상황의 반복. 민주당 정권 집권시에 운동진영 대응에 관한 대중적 평가의 차이(지지엄호vs건설적 비판자)에 관한 갑론을박이 인권운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현실.

한편 원한과 증오, 혐오의 언어와 인식이 우리사회에 일정하게 퍼져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음

대선에서 드러난 20대의 정치적 의식 지형(지역·계층보다 세대로 분출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 운동진영의 대응

### 1) 원칙

촛불은(퇴진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내놓은 바가 있음. 특정 정치세력에 모든 과제를 의탁할 것은 아니라면, 촛불권리선언과 촛불개혁과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의 중단없는 그리고 과감한 개혁을 요구해야 할 것임. (물론 현재의 위기가 몇 몇 정책수단으로 또는 특정 정권에서의 결단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음)

특정한 입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인식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함.

## 2) 구체적 실천과제

### ○ 박근혜 게이트 심판의 실질화

- 세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게이트가 가능했던 구조를 타격해야 함
- 정경유착,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필요함

### ○ 위기 대응에 관한 운동차원에서의 개입

- ① 북한 핵·미사일 이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책
- ② 새 정부 초기 경제사회노동정책의 문제
- ③ 개헌 - 인권의 제도화·목표화로 귀결되는 운동에 대한 경계는 타당하지만, 개헌에 대한 종별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여겨짐. 30년 만에 맞이한 개헌 국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정교화된 구호의 필요성

- ① 80:20으로 드러난 탄핵 및 대선지형의 고려. 대선공약의 이행을 매개로 활용.
- ② 행정개혁과제·입법(여야 공동공약의 입법과 여야의 이견 입법의 차이)개혁과제/개헌 사항 구별

## 3) 운동진영의 내적 과제

### ○ 사회운동·인권운동의 현재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장기적 계획

- 비극적 사안·사건에 대응하는 헌신적 연대 · '나중에'로 치부되기 쉬운 입법의 제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의 반복. 그러나 두 가지를 초과하는 운동의 계획 및 공동연대 틀거리의 필요성
- 단순히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한국에서 인권운동단체의 영역과 임무를 재확인하는 것이나 . 지역·풀뿌리나 작은 운동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

기 어려운 조건임.

- 특히 정치적·조직적 주체화를 동반하는 새로운 해방과 운동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 10년 전과 같이 민주와 진보를 구별하는 방식이 지양. 오히려 민주·민주사회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발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의 필요성. 현재로서는 여성주의, 노조할 권리 등과 같은 질문들을 경유하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음. 당장 다수의 인식지형이나 다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역을 두려워해서도 안될 것임. 종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역없이 새로운 운동은 불가능함. 다만 주체화가 조직화로 연결되는 형태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음. 논쟁없는 맹목적 조직화를 지양, 그러나 교육학으로 정치학을 대체해서도 안될 것임.
- 한편 기존 운동형태(조직형태 및 실천형태)의 재생산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도 필요함. 종전의 진보정당·노동조합·사회운동단체가 작동해 온 매카니즘이 유효한가 또는 계속 유효할 것인가? 사안대응의 운동(또 종종은 역사적 알리바이를 위한 대응)이 아니라, '운동의 운동'을 만들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 필요함. 활동가들만의 현신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들. 10년 후 2027년의 운동은 어떠한 양상이어야 할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에 함께 해주세요.**

## **- 인권운동더하기 가입안내!!**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이하 인권더하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기지개를 켭니다. 인권회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 2000년대 초반 제도로 수렴될 수 없는 인권운동을 고민하며 출범하였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인권의 현장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제도화로 수렴되는 인권에 맞선 단호한 행동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인권의 중요함을 외치며 지금까지 행동해왔습니다. 인권회의는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성장과 다양한 영역과 인권의제로의 확장에 기여해왔습니다. 올해 초, 인권회의는 지난 10여년의 활동을 평가하며 지난 시기 인권회의의 성과와 고민은 이어받고, 더 활발한 인권운동의 연대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인권더하기는 더욱 활발하고 급진적인 인권운동을 목표로 인권단체들, 인권활동가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함께 찾아가보려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인권의 가치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서로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인권운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의 재생산과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과 제도의 잣대가 되는 '인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로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활동하려 합니다. 인권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 함께하기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곳! 인권운동 더하기에 함께 해주세요^^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가입절차**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권운동더하기에 함께하고 있는 1단체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과 1주정도 시간을 통해 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단체들의 이의가 없을 시 가입이 완료됩니다.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에 함께 하시면!

- 인권더하기 참여단체로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인권더하기 hrcomm@list.jinbo.net 메일링을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각 단체들의 활동 소식등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인권더하기 회비는 1년에 10만원 또는 월 1만원입니다.  
회비납부는? 회비납부 국민 498101-01-279517 김용민(인권운동더하기)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7년 진행중인 사업

- 6월 ~7월 신입활동가 교육
- 7월 네트워크 파티
- 하반기 프로젝트 그날들

◎ 문의

- 메일 : hrcomm2017@gmail.com
- 전화 : 010-5608-0288(다산인권센터 탈라), 010-3667-2256(인권운동사랑방 미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MEMO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메일 | [hrcomm2017@gmail.com](mailto:hrcomm2017@gmail.com)